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사업 12년째 공정률 겨우 33%

전남도,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민간 투자 한계
서남권 일대 'RE100 산단' 집중 육성 등 국차 차원 지원 절실

전남 서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민간 투자 의존의 한계로 더디게 진행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서남권 기업도시의 성패는 새 정부의 지방 점진 지역 불균형 해소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발표하기로 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담아내고 나아가 솔라시도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일대를 RE100 산단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김성일(민중·해남1) 전남도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착공한 솔라시도의 현재 평균 공정률은 3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삼호지구 31.1% 삼포지구 36.2%, 솔라시도의 핵심 사업자인 구성지구마저 34.4%에 머무르며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의 핵심인 산업·주거단지 부지의 분양 실적이다. 총사업비의 82%를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소나 골프장 부지를 제외한 실제 분양률은 바닥권이다.

구성지구의 경우 분양 대상 면적(산업·주거·학교 등) 982만㎡ 중 실제 분양 완료된 면적은 41만㎡로, 분양률이 4%에 그치고 있다. 삼호지구 역시 분양 대상 면적의 6%만 주인을 찾았다. 정주 여건과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과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는 것이 한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게다가 15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최근 사업자가 계획을 철회해 무산됐고, 15조 원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투자 협약은 이행시기를 6개월 연장한 상태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솔라시도를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의 돌과 구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부지로, 산단 조성에 모든 요건을 갖춘 솔라시도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솔라시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해 'RE100'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첨단기업에게 가장 매력적인 입지다.

결국 민간 투자의 한계와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솔라시도를 RE100 산단으로 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RE100 국가산단 특별법'에 기업이 매력을 느낄만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국가산단 지정을 통한 신속한 인허가와 송전망 구축, 전기요금 차등 적용, 국제학교와 병원 등 핵심 정주 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을 담아내고 솔라시도를 국가 책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전남도의 회 도정질의에서 "정부가 RE100 산단을 만들기로 했고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한 것에 전남도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태계 기반이 조성돼있기 때문에 RE100 산단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남도에 산단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일 의원은 "학교, 병원, 주거단지도 없는 도시에 기업과 사람이 올 리 만무하다"면서 "솔라시도가 서남권의 명실상부한 성장 거점이 되려면 단순한 민간 개발 사업을 넘어, 정부가 정주 여건과 기반 시설을 책임지는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훈련도 실전처럼” 광주소방안전본부와 남부소방서는 18일 광주시 남구 빔고를 전남대병원에서 헬기 추락으로 대형병원에 복합재난이 발생할것을 대비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역차별 제도 개선 촉구

전남도의원 13명 성명서 발표

전남도의회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시'가 역차별을 받고있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와 순천, 여수, 광양 등 도농복합시에 지역 구를 둔 전남도의회 의원 13명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농복합시 농어촌은 30년 동안 제도 밖으로 밀려난 채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다"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시 단위에 편입됐다.

도농복합시 읍·면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활성화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명백한 농어촌임에도,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농어민 생존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을 포함한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도에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농어촌 지원사업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정영균(민중·순천1) 의원은 "도농복합시 농어촌은 고령화, 인구 유출, 생활 기반 붕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그 해법이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임금체불 차단·야외안전 강화...광주시, 추석 민생·안전 살핀다

현장 점검·성묘객 안전 지침 안내

광주시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과 안전 확보에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시는 건설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성묘와 별초 과정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 안전 지침을 알리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10월 2일까지를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 조사와 청산 지도에 나선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체불이 드러날 경우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고용노동청과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사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근로자들이 명절 전 임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건설현장 임금체불신고센터(062-613-4621)를 집중 운영하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아울러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별초와 성묘객 증

가에 대비해 별 쏘임과 뱀 물림 등 야외활동 안전 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광주에서는 올 7-8월 생활안전활동 8333건 가운데 벌집제거가 1890건(22.7%)을 차지했고, 뱀 포획도 61건 발생했다.

말벌은 진한 향수나 화장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사용을 피하고, 흰색 계열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방안전본부의 설명이다. 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맨발이나 샌들 차림을 삼가고, 연못 등 양서류가 많은 곳에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지방정가 라운지

“완도 섬 지역 식수난 해소위해 시설 확충 나서야”

이철 전남도의원 주장

전남도의회가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철(완도1) 전남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 섬 지역의 극심한 식수난 해결을 위해 광역상수도 시설의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완도 넓도의 경우 지난 2023년 317일간 '1일 급수, 6일 단수'의 제한급수를 실시했다. 보길도·노화도·금일도·소안도 등 타 도서 지역도 10개월 넘게 제한급수를 겪었다.

이 의원은 "김영록 도지사의 결단으로 추진한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현재 발주



단계에 있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그러나 노화와 가까운 넓도, 서넙도, 소안도는 여전히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역상수도 없는 넓도와 서넙도는 해수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거나 생수를 구입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전라남도가 직접 나서서 상수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섬 주민 누구나 걱정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